

2026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6년 10대 농정 이슈 발표 | 2025-12-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대내외 여건과 농업·농촌 주요 현안을 고려하여 2026년에 주목할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하였음.

 - 국내외 경제 전망, 고환율, 기후변화,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농촌 여건 변화가 한국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10대 농정 이슈를 발표함.
- 이슈 1. 위험 관리 체계 정교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실현

 - 기후변화와 국제 곡물 가격·환율 변동 등 농가소득 위험요인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의 제도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2026년에는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를 합리화하고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위험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 소규모 농가와 복합경영 농가 등 제도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2027년 도입 예정인 비보험작물 프로그램을 사전에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연재해성 병해충 보장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의 전국 확대를 추진해야 함.
- 이슈 2. 위기 대응형 지원에서 농업 경영비 상시 지원체계 구축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 사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높아져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기존의 위기 대응형 일시 지원 방식으로는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상시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2026년 12월 필수농자재지원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필수 농자재 범위 규정과 지원 수준·단가 결정 기준 마련, 국제 시세 변동 반영 방식 등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가격 예측 시스템 구축과 수입 다변화·비축 등을 통한 경영비 완화도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음.
- 이슈 3.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식량안보 체계 강화

 -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위기로 국제 곡물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쌀 수급 불균형이 누적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 접근의 한계가 드러남. 2026년에는 식량안보 법제화 논의와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쌀 재배 면적 조정과 밀·콩·조사료 등 전략작물 확대를 위해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 예산(4,196억 원)과 지원 면적(20.5만 ha)이 확대됐음.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판로·수요처 연계 및 계약 기반 거래 확대가 필요함. 또한 수입선 다변화, 장기계약·물류 거점, 비상 반입 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함.
- 이슈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착과 향후 방향 모색

 -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10개 군을 선정, 2026년 1월부터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될 것임. 선정 직후 시범지역에서 단기적인 인구 증가가 관찰되며 정책 기대감이 생김. 하지만,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구조에서 광역단체 30% 분담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 악화 및 기존 사업 축소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임.
 - 2026년은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 소비 증가, 공동체 활동 참여 등 정책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임. 이에 더해 군 단위 지급 방식의 적절성, 지역화폐 효과성, 자원 조달 구조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슈 5.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조절 강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2025년 기후변화로 농산물 공급 차질 반복과 물가 불안으로 단기 대책의 한계가 지적되며 선제적·구조적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짐. 동시에 도매시장 법인의 과도한 이윤과 복잡한 유통 단계 문제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유통 독과점 완화와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대두됨.
- 2026년에는 기후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기상조기경보와 생육 모니터링 고도화 및 공급 충격 대응 장치의 상시 체계화가 필요함. 또한, 거래 관행·수수료 구조 개선, 도매시장 법인의 투명경영과 적정 마진 유도를 통해 유통 구조 개선 성과를 가시화해야 함. 특히, 디지털 유통 확산에 대비하고 계약 기반 거래를 확대하여 생산·유통 단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함.

● 이슈 6.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적 전환

- 농촌 빈집 정비는 농어촌 빈집 특별법을 기반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며, 향후 정책 성과는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확장해야 함.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주도형 서비스 모델을 확산하고 기존 정책과 연계 강화도 필요함. 의료·복지·돌봄 투자 확대와 디지털 기반 원격의료·스마트돌봄 등 혁신 서비스 도입도 과제임.
- 2026년 농촌공간 기본계획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 기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빈집 정비, 생활 서비스 확충, 지역산업 육성을 공간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 이슈 7.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의 구조적 전환과 실천 기반 확대

- 기후위기 대응 요구가 커지면서 농업 정책이 생산 중심에서 환경·에너지 등 비생산 영역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 하지만 공익직불제의 환경 성과와의 연계 한계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제도적 안정성 부족,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 정체 등 한계가 지적됨.
- 공익직불제는 친환경 직불 확대와 함께 탄소중립·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 도입을 통한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환경 실천을 제도적 보상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임. 또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되고 가축분뇨·농업부산물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 확산이 기대됨.

● 이슈 8.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및 고령 농업인 은퇴 지원 고도화

-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초기 소득안정 지원 부족, 정책자금 상환 곤란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책의 질적 내실화 필요성이 커짐. 또한, 농업인의 은퇴는 지연되고 있어 은퇴 유도 정책 강화 필요성도 커짐.
- 청년 농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와 담보 중심에서 사업성·영농능력 중심으로 금융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함. 경영이양형·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의 가입률 제고와 경영이양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함. 예비농업인제도와 농업인 퇴직연금 저축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핵심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 이슈 9. 식품 보장성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의 확대

-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공급망 확보와 예산 지원, 물가 연동 지원 및 대상 품목 확대, 유사 프로그램 간 중복 및 사각지대 최소화 등 향후 먹거리 기본권의 제도화 방안 모색이 과제가 될 것임.
-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관리 근거 마련으로 데이터 기반 사전 예방형 안전 관리체계가 고도화될 전망임. 또한, GMO 완전표시제와 Non-GMO 표시 시행을 앞두고 표시 대상 품목, 표시 방법 등 구체적 세부 기준 마련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 이슈 10. K-브랜드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연계한 K-푸드 수출 확대

- 농식품 수출은 성장하고 있으나 미·중·일 3국 편중 구조로 수출의존도가 높고, 가공식품 위주 수출로 농가소득 연계성이 약함. 따라서 신선농산물 시장·품목 다변화와 수출통합조직 지원 제고, 비관세장벽 완화, 핵심시장 기반 강화 및 신흥시장 인프라 구축 등으로 농식품 수출 경쟁력의 고도화가 필요함.
- K-컬처 확산으로 현재 조성된 호의적 시장 환경을 생산-가공-유통-마케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하여 수출 규모의 획기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K-푸드 수출산업화를 도모해야 함.